

- 일시 2019년 8월 14일
- 장소 경사노위 7층 중회의실1
- 참석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사회 신수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배석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력홍보팀 전문위원
최선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무관

60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수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붕괴가 양극화 원인

신수정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개괄적 논의는 지난 번에 했으니 이번에는 원인 진단과 정부 정책 평가, 정책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다뤘으면 합니다.

이덕재 지난 1차 대답에서는 주로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폭넓게 논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교수님께서 한국사회학회지에 쓰신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김영미 교수님께서 노동시장 접근과 함께 좀 더 넓게 사회학적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건호 위원장님은 재정, 국가의 역할, 공적 영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윤홍식 교수님께서 사회정책 쪽으로 연금특위나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진단도 해보고 양극화 해소 방안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신수정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수정입니다. 우선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입장에서 들어봤으면 합니다. 전병유 교수님은 책에서 다중격차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김영미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김영미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불평등과 양극화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이 90년대 말 이후에 커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외부적 충격, IMF 이후에 불평등이 커지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노동시장 안에서의 구조적인 원인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됐죠.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불평등이 커져왔느냐를 보면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노동시장의 바닥이 꺼지면서 불평등이 증가되어 온 측면들이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높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서 엄청나게 불평등이 증가하는데 한국은 그 대신 50 이하, 소득 하층에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과정이었고 그것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저학력 저숙련의 노동계급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소득 하층이 깨지면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는 한국이 그나마 유지시켜왔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남성 1인 생계부양자가 돈을 벌고 여성이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는 식의 체제가, 암묵적으로 우리가 유지시켜왔던 체제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양극화의 큰 흐름을 아래 하층으로부터 시작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붕괴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여파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장 큰 여파가 초저출산의 장기지속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병유 선생님이 ‘다중격차’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다중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등 증가와 인구변동 두 가지 위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풀려면 같이 풀어야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붕괴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부터 그 사회적인 결과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구변동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사회개혁,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돌봄의 개혁 같은 국지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덕재 브레드위너 모델(Breadwinner model)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탈산업화 경로 속에서 IMF 쇼크가 크게 충격을 주면서 그 힘을 강화시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탈산업 현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1인 남성부양자 모델이 깨지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로는 먼저 산업화의 길을 걸었던 나라들이 똑같이 겪던 문제잖아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복지제도라든지 산별 등 여러 시스템 속에서 그 모델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궁금한 게 산업구조의 변동을 겪으면서 이 모델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일본 등의 나라들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김영미 탈산업화된 사회에서의 사회적 협약의 변화, 생계부양자 체제의 변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회 생산과 재생산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풀어냈던 나라는 북구의 나라들이었어요. 그 나라들에서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포기하면서 맞벌이 맞돌봄 모델로의 사회적인 전환을 하게 됐죠. 맞벌이 맞돌봄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회적 전환 속에서 이들이 했던 탈산업 시대의 케인지언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던 것이죠. 여성들을 맞벌이 돌봄이 가능한, 남녀 모두 맞벌이 맞돌봄이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인프라에 대한 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게 탈산업화 케인지언 주의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돌봄의 인프라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 기반으로 광범위한 중산층을 만들어냈던,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모범적 형태로 전환을 이뤄냈고 그 덕분에 안정적인 분배와 출산율이라고 하는 사회재생산을 동시에 성취했던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사례들을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비용을 절대 원칙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오건호 오늘 큰 주제가 불평등인데,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을 진단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수 있지만 불평등, 격차 같아요. 그리고 사회마다 시대마다 긍정적인

면도 드러나고 또 부정적인 면도 드러나고 혹은 긍정과 부정 동시에 혼재하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떠올리고 또 ‘헬조선’으로까지 귀착되잖아요. 크게 보면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사는 사회가 정의롭지 않고 불평등한 격차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건 내재화되어 있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선 적응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체제위기라고 봐요. 자기가 존재하는 사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시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부정적인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정당성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원인은 아까 다중격차 얘기하듯이 다양해서 하나로 꼭 꼽을 순 없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크게 보면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게 산업구조의 변화겠죠. 기존에 안정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격차가 양산되었던 것도 한 요인이죠.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하듯이 인간의 기술 생산력 발전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반드시 진행되는 거거든요. 서비스 산업화가 이뤄지는데 그런 산업구조의 개편에 그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악마적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이후부터 노동을 싸게 매기는, 최소비용을 절대적 원칙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잖아요. 그건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한국에서 특히 더 그랬던 데에는 최소비용으로 사람을 쓰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우리사회 대응의 실패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청년세대들한테 책임 물을 순 없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주역 계층, 주역 세대들이라고 봐요. 지금 노동시장 중심에 있는 세대들이 이런 새로운 물결들, 서비스산업화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쉬운 과제는 아니었지만 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거기에 그냥 순응한 거거든요. 최소비용을 쓰는 것 자체가 경쟁력의 이름으로 온존되다 보니까

이 지경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일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의 책임이 크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회세력인 노동, 시민사회, 지식인 계층을 통틀어서 특히 시대적으로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98년 IMF 금융위기 이후를 전환점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한 값싼 노동에 대한 규범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상 타협한 게 오늘의 구조화된 격차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걸 희망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윤홍식 네,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전망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쉽지 않다는 거죠.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상을 놓고 보면 불평등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로 일단 봐야 하는데, 절대적 수준하고 상대적 수준입니다. 시장소득을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OECD 국가에서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불평등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이걸 명백하게 상대적 측면에서 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 원인은 국민국가 차원의 문제와 국민국가 밖 세계자본주의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국가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7년 IMF 위기가 중요한 촉매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과 불평등이 탈구조화됩니다. 성장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92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하는 모습인 거죠. 실제로 불평등은 90년대 초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문에 그랬다고보다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었고 그것이 IMF를 통해서 촉진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성장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산업화 시대 한국의 복지체제를 개발국가

복지체제라고 부르는데, 즉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90년대 초부터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의 성장방식이 변한 것이죠. 그때부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자동화, 조립화 성장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됩니다. 90년대 초 이전에는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이 같이 갔어요. 재벌 대기업이 수출하면서 만든 부가가치가 국내 중소기업으로 퍼져나갔죠.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가 진행됐던 거죠.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제가 90년대 초반 이전에는 작동했던 겁니다.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한국은 서구로 치면 포드주의라고 하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90년대 초에 3저 호황이 끝나면서 한국 자본, 특히 대자본이 선택을 합니다. 숙련된 노동을 포섭하는 체제로 갈지 아니면 그걸 배제하고 자동화 방식으로 이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1990년대 초에 있었던 3당 합당이 맞물리면서 노동을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독주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성장의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97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제조업과 정규직 노동자에 기초한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 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복지확대가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게 된



윤흥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평등의 심화 원인은
국민국가 차원의 문제와
세계자본주의의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자본주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1997년에 김대중 정부, 2002년에 노무현 정부가 당선됐는데 2008년까지 불평등이 계속 증가합니다. 사회 지출이나 복지도 계속 증가하고 성장도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걸 설명해야 하는데 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를 세계자본주의를 놓고 보면 신자유주의가 최정점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금융소득, 자산소득이 최정점에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한국도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자본주의의, 금융자본주의 정점의 시대에 국민국가가 불평등을 막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그 시기에 모두 불평등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2008년을 지나면서 금융위기가 닥치고 금융자본 수익률이 현격히 저하되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불평등이 감소하고 노동의 소득분배율이 증가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수 정부 시기였는데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세계자본주의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경향, 즉 거시적 원인과 미시적 원인들을 결합해야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진단이 나오더라도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체제의 변화, 정치적 변화, 복지체제 전반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은 세대문제가 아니라 계층문제

이덕재 최근에 이철승 교수님 책이 화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과거 386 세대들이 세대 간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일종의 86동맹으로 청년세대들을 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홍식 기사로만 접하고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86세대라는 현상문제가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인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나 시점은 다르고 명칭을 달리 불렀지만 서구에서도 그런 유사한 경향들이 나타났고 일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이라면 86세대 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나 논쟁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의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죠. 한국 제조업 문제를 ‘조숙한 탈산업화’ 또는 ‘이른 탈산업화’라고 하는데 미국 제조업이 100에서 탈산업화했으면 한국은 60% 정도의 탈산업화였고, 인도는 15% 정도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됐어요. 그걸 일국적 문제로 특정한 세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보편적으로 적절할 것인지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자본주의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위치, 그리고 그 속에서의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다른 사회 보편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86세대에 대한 질문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미 저도 이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떤 세대든지 어떤 판 속에서, 게임 속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 극단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플레이를 하는 규칙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규칙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세대적인 갈등과 배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불평등의 원인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게 사회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에는 이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평등이라는 괴물에 이빨을 달아주는 것은 상품화라는 겁니다. 교육, 주거, 건강, 안전, 돌봄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만 사야 되고 어떤 서비스든 간에 공적으로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 내 돈을 주고 시장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능한 방법인 그런 조건이 될 때 개인들의 플레이의 결과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변화라는 큰 자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고통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사회가 증가하는 불평등 속에서 얼마나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는 체제를 조직시켜왔느냐, 어떻게 상품화에 저항하면서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유지시켜왔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것이고, 저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집단 간의 쟁투, 세대의 쟁투, 젠더 쟁투 이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정 요즘 청년세대 문제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불안하다, 일자리가 저질이 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축은 86세대라는 거죠. 86세대가 현재 청년 연장 논의를 이끌고 있고, 그래서 세대론을 제기하셨던 거라고 봅니다.

윤홍식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386세대라고 얘기하지만 80년대에 대학 다닌 사람은 굉장히 선택받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통칭해 386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386세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소수의 특권층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그것을 세대담론으로 가져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 아닌가요?

오건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86세대론으로 해서, 심지어는 계층 등의 다른 요소들보다 더 상위개념으로 현재 불평등을 설명하는 세대담론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굉장히 구조화된 격차인데 그 기득체제를 갖고 있는 게 40대 후반, 50대거든요. 연령대상 기득체제의 주역이 86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6동맹이고 86이 다 해 처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전체 386이 아니거든요. 기득 86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 층은 정치적인 분도 있고 보수적 경영인도 있을 수 있고 조직화된 노동도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들이 이 구조화된 기득 격차사회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해 왔느냐, 아니면 여기

에 안주했느냐 본다면 안주한 측면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득 86에 대한 현 체제의 불평등의 책임 요인 중 하나라는 비판은 강하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봐요. 현 정부에서 기존의 86들이 요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징성이 더 드러나는데 지금 체제로 보면 같은 50대라도 가난한 50대도 많거든요. 노동시장이라든지 인구구조가 후세대한테 더 불리하게 가다보니까 세대담론이 가중된 건 있지만, 현 체제의 불평등 문제는 결국은 계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문제의식에 많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뀌야 되는 거잖아요. 바꿀 때 우리가 어떤 집단을 특정하고 그 집단에 특별한 담론, 그러니까 집단을 의인화하는 거죠. 그래서 86세대라는 식의 의인화된 뭔가를 만들어서 집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전체 문제 해결하는 데 과연 도움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것, 그 집단 안에서 개인들은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게임 플레이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을 바꾸려면 이 틀을 어떻게 바꾸야 하는지,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야 하는지의 문제지 집단을 특정해서 의인화하고 그들을 계속 악마화하면서 비난하는 건 속은 풀릴지언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담론이 진행되는 방식들이 참 아쉽습니다. 86세대, 여성, 젠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집단을 특정하고 의인화한 다음에 악마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것이죠.

윤홍식 사실 내용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표출되어서 나오는 건 굉장히 자극적이죠. 지금 386세대가 상징하는 한국의 상징성, 예를 들면 진보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민주화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든 나라가 이 모양이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만들고, 청년 일자리 없는 나라 만든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의 민주화 과정들, 이행 과정들, 산업구조의 과정들 거기서 권위주의적 기득권 세력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감춰진 중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건호 정년연장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계층담론이나 세대담론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일종의 기득 86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당위론적으로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건 곤란하다고 봐요. 중장년·고령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제기됐을 때, 퇴직 시기와 연금 수령 연령에서 격차가 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정년연장을 끌어오지만 과연 정년연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작동했을 때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에요. 우리가 기존 57세를 60세까지 정년연장을 했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저는 중장년, 노년의 일자리도 다양한 지위, 계층의 시야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년연장이
우리사회에 작동했을 때
긍정적 효과 낼 것인지
의문이다

고령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경제를 부활시켜서 거기서 고령자들이 들어간 다든지 제3섹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고령 노동자들이 일자리 개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전통적인 정년연장이 가동될 수 있는 건 기존의 코어에 있는 집단에서만 가동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편에서는 상상력의 빈곤인데 거꾸로 이야기 하면 현재 기득체제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안주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기득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를 주도한다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그만큼의 책임이 요구되는데 풀어가는 방식들을 보면 집권정당이나 조직노동이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어려운 계층이 정서적으로 충분히 그들한테 화살을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 나름의 정서적인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진 세력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본질은 계층이라고 보지만 세대라는 모양으로 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계속 꼬이게 되겠죠.

윤홍식 정년연장 문제도, 우리나라가 어떤 이슈를 이야기할 때 하나를 꼭 집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년연장이 가능하려면 산업 구조, 일자리 구조나 사회보장체제 등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변했을 때를 전제로 가능한 거죠. 사실 유럽이나 서구복지국가는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고 그것 없는 정년연장은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해법

김영미 정년연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인구 고령화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로 나온 것이고,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 대안들은 많거든요. 예컨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고등교육을 시켜놓고 우리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여성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털 한다는 거죠. 지금 50~60대가 새로 나오고 있는 플랫폼 이코노미나 각 이코노미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사장되고 있는 20~40대 여성 인력들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주요한 대응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 추정에 따르면 우리 인구가 생각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줄어 들고 있어서 통계청이 제시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OECD 중간 정도인 미국 수준 만큼으로만 경제활동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문제에는 상당히 크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철희 교수님은 한국의 25세-54세 여성 경제활동률이 미국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2043년까지 경제활동인구를 현재의 90%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애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죠.

이덕재 그런데 그 대안들이 작동하게 하려면 조건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쉽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 아닐까요.

윤홍식 저는 대안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탈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90년대 초반에 이미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이동이라는 게 명징한 거잖아요. 북유럽이나 북서유럽의 사례를 보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공적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OECD 통계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적 일자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7.6% 정도인데, OECD 평균은 15%, 스웨덴, 노르웨이는 25~30% 가깝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3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의 90%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즉 공공부문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장 비중은 10% 밖에 안 돼요.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은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과 세금과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강력하게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답을 알고 있지만 답을 이행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영미 저는 그 답은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부문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드는 스웨덴 방식, 북구 방식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다양한 방식들이 가능하고 한국은 더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로 여성들을 다 집어넣는 것, 이 아이디어들이 가지고 오는 폐해들에 대해서는 북구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여전히 만연해 있는 차별들,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제어하고 여성들을 더 많이 민간부문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특히 좋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진입해야 하는데 우리 통계를 보면 처참합니다. 100대 기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20% 밖에 안 되니까요. 좋은 일자리에 여성들을 들어오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여성들이 광범위하게 있는 민간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전히 개인 단위에서의 자료들을 가지고 양극화를 얘기하는데 사실을 가구도 좀 더 들여다봐야 해요.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에서 여전히 가구소득의 가장 큰 결정요인은 가구원 수,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여성들이 일을 하고 맞벌이할 때 상당히 많은 가구에서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들이 있는 일자리들이 지나치게 저임금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이 벌 수 있을 때 가구단위의 양극화 문제도 훨씬 더 빨리 해소할 수 있어요.

윤홍식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상적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 측면을 보면 OECD 전체를 비교해보면 취업가능인구 대비 민간부분의 취업자 비중이 우리가 5위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전체취업자 대비 공공부분의 취업은 굉장히 낮아요. 제일 낮은 부분이죠. 전체 고용률이 낮은 민간부분을 확장하는 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적부분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여성들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노동시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등 취약한 일자리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중간계급의 여성들이잖아요.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저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장에서의 임금격차, 성별 간 임금격차, 여러 가지 젠더 불평등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의 핑크 잡이라고 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은 있는 거죠. 한국적 상태에서 지향점이 있고 단계적 이행과제가 있는데 민간부문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정부 자본을 투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산업구조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할 수 있고 정부 자금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좋은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단기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고용이나 취업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스웨덴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조조정과 정치적 개혁들이 필요한 거죠. 누적적이고 단계적 부분들이 있기에 당면과제를 하면서 시간이 벌어지면 우리가 중장기로 해야 될 개혁들을 이 기간 동안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건호 여성노동의 핵심은 고용의 질을 양질로 바꾸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부문도 요양 영역이든 사회복지현장 영역이든 많은 분들이, 또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그 분들한테 퍼블릭이라는 브랜드와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들도 마트 등 민간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데 많은 경우 저소득 계층이 불가피하게 생계 압력 때문에 나갑니다. 그것을 양질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적 복지, 보육 복지가 강화되는 건 출산과 보육 돌봄에 붙들려 있는 여성이 시장

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기업의 비용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출산과 보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이 사용자 입장에서선 불리한 인적자원이거든요. 출산과 보육의 부담과 비용이 사회화된다면 여성도 훨씬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사용자들도 여성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 양질화가 필요하죠.

지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보듯이 모양만 바꿀 뿐이지 처우개선은 많이 이뤄지진 않거든요. 고용안정은 주되 처우개선은 미비한데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교섭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봐요. 다양한 사회서비스영역과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 장벽들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놔둔 상태에서 몇몇 정책적 지원책이 들어간들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윤홍식 사회서비스 임금에 어느 사회는 높고, 어느 사회는 낮은가.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 생산성과 관련이 되는데 사회서비스의 서비스 생산성은 결국 그 사회의 임금수준의 문제이고 서비스의 임금수준 여부는 나머지 사회의 임금수준과 연동돼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대기업 일자리 10대 나머지 일자리 90이 있는 사회에서 당연히 사회서비스의 임금과 생산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10대 90으로 나뉘어져 있는 산업구조를, 대기업 독점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죠. 공공부문도. 그래서 딜레마인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공공부문을 늘린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 문제는 하나를 꺼내면 모든 것이 끌려오는 문제라서 비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덕재 그동안 불평등 혹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질적인 진단은 많이 논의된 듯합니다. 양적인 관점에서 엄밀하게 수량화해서 계산하기 쉽지는 않지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들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서구에서는 주로 남녀간 임금격차의 불평등 기여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는데, 남녀 간 임금격차가 OECD에서 가장 큰 나라니까 당연히 양적으로도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축적 생산 체제 속에 자본집약도의 차이라든지 투자 규모의 차이, 그에 따른 생산 규모, 수익 규모가 맞물려서 격차를 낳는 힘으로 생각되고요. 인구구조학적 변화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1인 가구가 25%를 넘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 같은데 양적인 입장에서 어떤 게 주된 것일까요.

오건호 결국 격차는 두 요인의 영향을 받겠죠. 첫 격차가 시장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에서는 기업 간 격차, 소득자산 격차가 크지요. 그 격차가 시장에 생기더라도 다시 줄여주는 게 재분배고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시장에서 격차가 너무 크고 분배가 그 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 정부나 복지의 역할이 작습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최종 소득 격차가, 불평등 격차가 커지는데 여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게 대응력이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자본의 힘이 커진다면 자본에 대응하는 노동의 힘이 한국에서 얼마인가. 양대 노총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자본이 움직이는 것에 개입하고 있으며 혹은 사회적으로 무엇을 제안하고 끌어가는데 있어서 신뢰 혹은 사회적 시민권을 얻고 있느냐. 저는 좀 위험단계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자본은 지금 완전한 힘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핵심 주체인 노동은 구사하고 있지 못하고 코어에 있는 집단들도 자기 자리 지키는데 머물러 있다고 봐요. 분배의 영역에서 정부를 압박해서 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도 복지가 투입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노동자나 계층들이 시장에서 격차에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분들일 거잖아요. 이런 데서도 과연 친노동이라고 하는 현 정부가 얼마나 하고 있냐에 대해 저는 비판적이거든요. 결국 핵심요인은 국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 기조가 한국에서 훨씬 더 강하게 등장하고 격차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에 대항하는 대응력에 부재, 그것은 정치권, 노동, 시민사회 모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IMF나 세계은행, OECD가 이야기하는 것은 숙련편향적 기술 발전 때문에 저소득층 인적자본이 축적을 따라가지 못했고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적자본을 높이고 소득 지원해서 노동시장이 제대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IMF나 세계은행이나 OECD가 주장하는 바고 ILO 주장은 또 다른 거죠. ILO가 주장하는 임금주도성장은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불평등을 강화시켰다는 견해죠. 이 두 개가 서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ILO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숙련편향적 기술 발전은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의 부분적 요인인데, IMF나 세계은행은 그것이 핵심적 요인으로 등장하는 거죠.

김영미 이게 다층적으로, 층위가 다른 요인들을 이야기 하는 건데 오렌지랑 애플을 비교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서 순위를 객관적으로 매기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뭘 바꿨을 때, 뭘 변화시켰을 때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겠냐고 질문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참 고민이 되네요. 무엇을 바꿨을 때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지.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고용이 낮은 대졸 여성들의 고용률을 증가시킨다면 공정한 것이고 인권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패턴을 봤을 때 여성 고용을 증가하는 것이 가구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냐에 대한 자신은 없어요. 사실 여성 고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아가지는

숙련이 현실화되는 것도
생산이 이뤄지는 것도 기업인데,
기업이 어떤 방식의
일하는 문화인지가 중요.
그러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는 결여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은 해요. 대신 그런 방식으로 갈 때 문제를 같이 해결할 동력은 되는 거죠. 남녀 모두 같이 나가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는 생산은 지금처럼 잔혹하고 무조건 시장지향적인, 경쟁지향적인 방식은 아닐 수 있겠다.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내 이웃들과 즐기면서 사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것을 통해서 분배의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OECD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숙련편향적 기술발전 같은 이야기들에 결여돼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를 안 해요. 실제로 숙련이 현실화되는 것은 기업이고 생산이 이뤄지는 것도 기업인데, 기업이 어떤 방식의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기업은 소수자 배제, 포드주의적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일어나면 처내는 게 답이 되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처내고 우리는 소규모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숙련편향의 악영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하지 않고 아! 숙련편향적 기술발전, 인적자원 개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여전히 19세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계부양자 남성을 이상적 근로자로 삼고, 돌봄 부담이 없는 사람을 이상적 근로자로 삼고,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일을 분배하고 보상하는 체계의 상상력을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체계로 갈 때 유연하고 좀 더 소수자 포용적이고, 여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시너지를 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는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의 영향력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는 높았는데, 전략과 비전이 안 보인다

신수정 자연스럽게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 정책 방향 모색 얘기를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소득 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대한 평가를 해보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까지 묶어서 평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건호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있겠죠. 눈높이를 낮게 잡으면 조그만 것도 멋지게 보이고 눈높이를 높이면 하찮게 보이고 할 텐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정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가 엄청 컸죠.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누적된 적폐들, 정치적 적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조의 적폐들이 나라다운 나라의 슬로건에 맞춰서 단기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기대가 무척 컸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 좌초라는 표현은 센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고요. 왜 길을 잃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젠 제 개인 판단입니다. 다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길이 설정되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소득주도성장, 사실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 최저임금만 보냐고 정부에서는 아쉬워하지만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계지출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다양한 정책을 종합상자로 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이 증가하려면 핵심요인이 교섭력이나 정치력이라고 봐요.

답론으로 야기했던 소득주도성장도 불분명하고 그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노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계적 중립으로 갔다고 봐요. 최저임금은 사실은 88만 원 세대 이후부터 저임금 세대이다 보니까 시대적 압력이 컸다고 봐요. 최저임금 해놓고 산입범위에서 점수를 까먹고, 52시간 해놓고 탄력근로제에서 또 점수를 잃고, 이게 기계적 중립이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가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기구는 필요해요. 여기다 다 던져놓고 여기서 합의가 되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질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내 이 의제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정치라고 봐요. 왜냐

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주체들의 사회적 신뢰나 대표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구는 필요하지만 이 의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압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대정신을 읽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이라든지 사람들이 진짜 고달파 하는 것이거든요. 굳이 편으로 따진다면 조금 더 친노동적으로 가도 됐다고 봐요.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동법 ILO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치고 가고 적폐 청산이라는 취지에서 갔으면 노동의 힘을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가는 거죠.

복지는 그냥 보수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고교 무상 교육, 아동 수당 등등. 문재인 정부 아니어도 시대적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포용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복지프로그램 전환이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공약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어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재정 전략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이 있었을까. 노동과 함께 사회적 힘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 재정 전략이 있었을까, 계속 의문이 들어요.

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저는 기대했던 것만큼 획기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2년 지난 상태에서 기대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만 평가니까, 저는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2년 간 시행착오에 대해서 교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정권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전과 실력을 가진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홍식 저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뭐냐? 좌파 정부냐? 진보 정부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 뒤엎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계승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프레임에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든

보수당 정권이 등장하든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그 이전의 보수 정부와 자유주의 정부와 차이가 있느냐. 보수 정부와는 정치 측면과 대북 문제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에서도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해요.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나면 시민사회는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이 정부에게, 좌파정부가 아닌 정부에게 좌파적 개혁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근현대 역사를 보면 4.19혁명도 그렇고 87년 6월 민주항쟁도 그렇고 중요한 시점에 민중의 항쟁으로 태어난 정권의 탄생은 대부분이 자유주의 정권이었거나 아니면 보수 정권에 가까운 정권이었는데 계속 혁명적인 개혁을 요구하거나 좌파적, 진보적 개혁을 요구했어요. 지난 수십 년 간 역사에서 해방 이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이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러면 진보세력이나 시민사회운동들도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평가를 하면 시대적 과제를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평가를 다시 한다면 두 가지로 하는 것이죠. 시대적 과제 부문에서 해야 될 과제,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전 정부와의 비교 평가가 남아있는 거죠. 저는 상대적으로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전된 사항이 있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자유주의 정권의 성격상 시민들이 요구했던 체제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변화는 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에게 과제는 분명한 거죠.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의 정치적 프레임에서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오건호 지금 시점으로 보면 결국 자유주의 정권이었구나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지만 2017년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눈높이가 높았던 거예요. 진보적 정권을 기대했던 것이고. 그런데 2년이 지나보니까 결국은 그랬구나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윤홍식 87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부의 성격은 명확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혁명적 상황에서 자유주의 정부가 집권했는데 자유주의 정부가 혁명적 상황들을 받아서 집행한 역사적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오건호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와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무상교육하고 기초연금 줬어요. 복지에 대한 시대적 민심이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증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당한 증세도 했어요.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바꾸고 합리화한 측면이 많아요. 결국 정치는 바깥의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적폐청산이나 남북대화에서는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북이 한 번 같이 살아보자 하니까 별의별 난관이 있다고 해도 치고 가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의제에 있어서 그런 방대한 독심과 비전을 가졌더라면 달라졌을 것 같고 그런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덕재 남북문제나 적폐청산 같은 경우는 정책의 대상이 뚜렷한 데 비해 사회경제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제도라는 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으로, 따라서 손해 보는 기득권층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저항들을 이겨내려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들이 오랜 논의 속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거의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윤홍식 결국 세력의 문제인 거죠. 87년도 그렇고, 4.19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정권을 만들지 못했어요. 조직화된 세력이 있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됐거든요. 4.19 때를 정확히 보시면 이때 상황과 87년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구

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연 한국에서 혁명적 개혁을 하거나 진보적 개혁을 하거나 좌파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들이 존재하느냐, 그것들이 세력화되느냐, 조직화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자유주의 정부에 좌파적 개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재정, 그리고 아이디어

이덕재 몇 년 전에 하르츠가 와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 성공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하르츠가 3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파워 즉 권력을, 둘째는 돈을,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꼽는데 특히 아이디어에 관한 언급은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예컨대 독일연방고용공단이 1920년대에 만들어져서 거의 80~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복지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쉽겠어요? 당연히 익숙한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것에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죠. 촛불정부 직후의 상황들을 하르츠의 의견에 비춰보면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파워와 재정 이 두 부분은 가장 가능성이 열려 있던 시기였던 반면,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에 관한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건호 초반에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통령이 보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거든요. 상징이죠. 이 때 느낀 것이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일자리 정부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했는데 일자리를 상황판으로 접근하다니. 사실 일자리는 정부정책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걸 상황판에 두고 명운을 거는 걸 보고, 이 정부가 정말 실질적인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가 회의적이었습니다.

김영미 우리가 비전이나 전략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했을 때는 다시

전통적인 언어들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과 재정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희망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기억하거든요. 그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 에너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 생활이 바뀔 수 있다, 내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좋은 일을 했고 우리는 좋게 바뀔 수 있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전환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정부가 들어왔으니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던 소망들이 잘 전달 안 됐던 것 같아요.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조직화된 대중들, 정당, 조직세력의 노조라든지 조직화된 목소리들이고 그 안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왔던 그 집단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좌우가 됐던 것 같아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집단들, 청년, 여성, 이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구나. 계속 튀겨 나오고 왜곡됐죠. 정책 결정 메커니즘 속에서 새로운 사회 비전들이 있었어도 실현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홍식 문재인 정부가 자유주의 정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자유주의 정부라면 그 성격에 맞게 공정한 시장질서가 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베가 고마운 이유는 어쨌든 간에 아베라는 외부적 충격이 그것에 대한 한국사회의 절박성을 부각시켰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힘으로 못 하는 것들을.

오건호 지난 2년의 평가에서 노동과의 파트너십을 이루지 못한 것은 핵심 패착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도 하나의 세력인데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 개혁하는 데 있어서 노동을 자신의 우군으로 가져가는 게 필수적이었어요. 물론 자초지종을 보면 정부도 할 말이 있고 노동계도 책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 단계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죠.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결정구조의 특성이라든지 대응방식을 정부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몰랐으면 이해가 될 테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을, 일종의 카드를 다 알고 있음에도 지금 노동과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대응력, 리더십 부족이라고 봐요.

윤홍식 노동이라는 정령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호리병에서 뚜껑을 열고 꺼내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섭력을 발휘하고 사회를 움직이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이덕재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공황기 루스벨트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키워드가 countervailing power거든요.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결국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시장주의적인 기제가 초래한 불균형 시스템을 억제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별체제를 합법화하고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농민 부분에 힘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단체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게 된 것이죠.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런 면에서 지난 시기에 한국사회의 취약부문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시켜 주는 법·제도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하는 것은 다들 공감은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막연하고 단편적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한국사회 취약부문
교섭력 강화시켜 주는
법·제도적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좁히려면 취약한 부분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기제들을 마련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셨으면 해요.

오건호 전공영역은 아니지만, 산별교섭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헌법정신에 의거하면 노동조합이 산별교섭 형태를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은 산별형태로 조직을 짜서 하나의 공통된 이해를 추구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교섭권이 있는 거잖아요. 노동 쪽이 기존의 기업별 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산별방식을 조직했다면 당연히 산별교섭권도 인정해줘야 하는 거고 그들이 테이블에 나오게 해줘야 하거든요. 결국은 제도화, 법제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만약에 산별 법제화를 사회적 화두로 꺼내면 당연히 자본 측은 반대하겠지만 어떻게 흘러갈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당장 떠오를 수 있어요. 기업별 체제에 안주해서 혼자 따먹는 것을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들도 산별교섭으로 가면 사회적 명분상 사회적 의제를, 연대임금 등을 꺼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임금인상률을 달리하든 뭐 하든 굉장히 전향적 방식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 봐요. 담대한 정부였다면 소득주도 성장이든 노동의 힘을 키우는 핵심은 주변화 돼 있는 이 분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하는 것이라면, 산별 법제화를 꺼내면 당연히 저절로 서너 개의 감자를 썰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 스스로의 혁신의 계기도 만들고, 노동의 힘도 만들어 내고 그걸 통해서 격차도 줄여가고 사회적 세력의 힘의 균형도 만들어가고. 절대 지금의 조직된 노동, 대공장 노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동의 힘을 키우는 핵심은
주변화 돼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조직화 하는 것,
산별 법제화도 그 방법

이덕재 노동의 힘을 강화시켜 주는 데 산별 법제화가 중요할 텐데, 어쨌든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영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여성, 청년 등의 발언권이나 권리들이 작동하는 기제들이 취약한 부분, 그리고 산별 교섭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건호 노조 조직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노조 조직으로 들어오면 되죠. 산별로 들어갔을 때 자기 이해가 대변되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큰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노조가 뭐예요? 그냥 가면 내 말이 먹히지 않지만 노조가 대변했을 때 사용자들이 듣는 거잖아요. 훨씬 더 강한 산별노조로 들어갔을 때 노조 효과가 인정되거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요인이 생길 것이고, 조직은 조직대로 가입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조 조직해나갈 수 있다고 봐요.

김영미 노조가 전향적으로 미조직 노동자를 얼마나 포섭할 수 있느냐,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경사노위든 사회적 합의체가 있다면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기존 노조 조직원들이 아닌 다른 노조 조직을, 일종의 적극적 조치 요구를 노동계에 하는 거죠. 조직화를 이만큼 했다고 할 때 우리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거죠.

10%가 다른 노동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고민해야

신수정 2017년에 정권이 바뀌고 희망적인 시기에 노동부에서 한 용역과제 중에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직화와 함께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노동권 의식을 고취하고 노조 조직을 이끄는 것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야기했던 것이 정부가 만드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냐, 정부가 왜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하느냐 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노동부에서 요구했던 게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조직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노동회의소 논의도 있었고 민중의 집도 있었고, 노동교육을 의제로 경사노위에서 가져가

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윤홍식 아이디어와 상상력의 부족인 것 같은데, 산업자본주의 방식의 전통에 기초한 세력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21세기에도 유효한가를 봐야 하는데 산업구조가 다 변화 하고 성격들이 변하는데 조직화 방식과 세력화 방식은 여전히 전통적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핵심문제의 하나인 것이고, 조직화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된 경우는 없어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거나 제도화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스웨덴, 북유럽에서 하는 겐트시스템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 시대에 미조직화 된 노동자나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노동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뭐고 그런 것의 제도적 구조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게 고민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될 것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이 제기되면 반동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아까 루스벨트가 얘기했던 힘들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을 대기업이 쥐고 있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90% 이상 조직돼 있고 그 노동자가 움직이면 한국 경제의 숨통을 쥐는 거거든요. 노조 조직률 10%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보면 이 10%가 작은 10%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10%가 누구를 대변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10%가 과연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에 있는 사람들과 전체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10%인지 그 부분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직노동에 대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10%가 전체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죠.

그래서 저는 조직노동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중이나 사회적 개혁의 싸움에 앞서서 스스로 계급 내의 계급투쟁과 정체성 확보를 먼저 해라. 10%가 다른 노동과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10%는 그냥 10%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말 세력화된 10%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덕재 유럽 국가들의 임금 결정은 산별 수준이든 지역별 수준이든 국가 코포라티즘 수준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제가 작동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 제도로, 사회시스템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별 임금 교섭에 의한 시장조절적 기제에서 작동하죠.

제가 김영미 교수님 논문에 인상 깊었다고 하는 부분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대기업 임금 부분이 선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하고의 격차가 벌어졌다가 5년 쯤 지나면 중소기업이 쫓아가요. 사회제도적인 임금 결정 기제가 없어도 조절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시장 조절 기제가 작동했던 거라고 봐요. 노동시장 압력에 의해서 초과 수요의 힘에 의해서 시차를 두고 쫓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시장이 초과공급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 활력도 잃어버리고 부문별로 잘나가는 부문과 활력을 잃은 부문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억제할 사회적 장치도 없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초과공급 상태,
이를 억제할 사회적 장치 없어
시장 조절 기제 작동 안해

결국은 시장 조절적 기제에 의해 과거와 같은 낙수효과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사회제도적인 임금 조절 기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실한 장치가 마련될 때 양극화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더해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들, 사회 간접 임금 시스템, 사회서비스 등 우회로를 통해서 직접임금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결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오건호 그래서 조직노동에 대한 아쉬움이죠.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지원투쟁을 많이 하잖아요. 조합원들도 늘고 있고, 그런데 지원투쟁이거든요. 제도적으로 격차를 줄일 플랜을 내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것에 안주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양대 노총이 역사적, 시대적으로 큰 사회적 주체였고 스스로도 자신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굉장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혁신이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의제개발이에요. 사실 그런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바깥에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죠.

기존 조직화 된 노동의 시민권이 90년대 피크를 찍은 이후에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것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동을 대변하는 주체로서 의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요.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난 내부압력을 거칠 수 있어요. 당장 산별교섭 체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부분 산별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대임금 형식이 가능하다고 봐요. 법정 투쟁 이겨서 성과급 타서 1회성 연대기금 만드는 것도 시작이라는 마중물 효과는 있지만 임금, 일자리, 노동시간,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연대적 개혁을 도모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공론화해 가야 해요.

최저임금 문제도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놓고 중간에 차등 인상을 격차를 내셔널 차원에서 내서 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구현되지는 않더라도 그럼으로써 노동을 한목소리로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대표성을 지녀가고 있는 것이니까. 노동의 영역, 임금의 영역, 연대임금에서도 그렇고 복지에 있어서도 재정 조달에서 사회연대 방식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연대라고 해서 고용보험료 올리는 것 괜찮아요. 노동 내부에 낙수효과 일어나거든요. 중심부에서 보험료 더 내고 일자리 리스크가 큰 쪽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내부 낙수효과 나는 거죠. 당연히 내부 홍역이 발생하겠지만 이익집단이 될 것인지 노동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사회적 임금조절을 어떤 제도나 기구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면서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라는 게 자율

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굉장히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임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정보가 없거든요.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으니 부당한 임금인 경우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톨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면에서 한국사회 임금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임금 공시제가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서로가 조금 합의해서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누구도 정보의 부재 때문에 착취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적어도 내가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개인들한테 이걸 주는 것이거든요. 개인들이 거대한 기업에 맞서서 아무런 무기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개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인 것이고, 노조에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기업에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인사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 기업이 좀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책임성이라는 것은 임금결정이나 인사결정에 대해 설명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결여돼 있는 게 중소기업 부문이거든요. 중소기업의 인사관리가 많은 경우에 일자리 내 임금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여기에 대한 경영지원도 같이 해야겠죠.

노조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라면, 노조 바깥에 있는 개인들은 정보라는 다른 종류의 수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노동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권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개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관된 문제의식 유지하되 실용적 방식으로 추진하자

신수정 기업과 노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상태에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죠. 지난 2년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활발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아울러 경사노위에 대한 제언도 부탁드립니다.



신수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오건호 출범 시점에 설정했던 정책 과제 목표가 있었는데 깃발은 남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꽤 많이 후퇴한 것들이 있다고 봐요. 현 정부가 애초부터 설정하지 않았던 걸 요구하기보다는 대선 과정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설정했던 것에 좀 더 충실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하곤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남은 게 자회사 쪽인데 고용의 안정성은 주지만 예산이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처우개선은 뒤따르지 않거든요. 자회사의 처우개선까지 뒤따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죠.

많은 복지학자들이 돌봄 영역에서의 민간화, 상업화에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결국 인프라를 공적영역으로 까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깃발은 남아 있지만 왜소화 됐는데,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이런 건 획기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서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제 폐지 속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조금 더 빨리 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공약에서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많이 후퇴했던 것들을 다시 애초의 정신으로 가라, 그러면 촛불정부 시점에서 가졌던 그 기대치에서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윤홍식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자들이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맞춰줘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렵겠지만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분들이 세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늦었지만 2022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5년 동안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행 단계와 이행 계획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총동원되어서 우리 사회의 비전에 대해서 5년 이후를 준비해야죠.

복지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있잖아요. 자본의 이윤 실현 방식이 예전에는 생산과 거래를 내부화하는 방식, 수직계열화하는 방식이었고 대기업 중심의 일괄 생산 체계였고 그게 사실은 복지국가의 토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하고 있어요. 자본이 이윤을 실현하는 게 외부화 되고 있어요. 거래비용도 생산비용도 다 외부화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500년의 역사를 보면 기업과 자본의 이윤 실현 방식이 변하면 그것을 되돌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만약 500년의 역사가 그렇다면 그것에 기반 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말 치밀한 대안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 일을 늦었지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윤 실현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복지체제도 전면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조점은 자유주의 정부에 맞게 자유주의적 개혁을 충실히 실행하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영미 이 정부가 들어와서 위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일자리위원회도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있고 다른 위원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위원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공통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가 참 궁금합니다. 가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컨대 일자리위원회라든지 경사노위 등 여전히 노동의 문제를 임금의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로 한정해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전통적 해결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돌봄 같은 부분들을 서로 간 대화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과 인구학적 변동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을 같이 타개하기 위한 핵심 고리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일하는 방식을, 그리고 사는 방식을 성역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분업이 아니라 남녀 모두 같이 일하고 같이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서 저출산과 불평등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전을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비전을 공유한 상태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각 단위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맞벌이 맞돌봄 체제로의 전환,
여성, 소수자 차별 없애고
그들이 가계소득 기여해야
위기 상황 타개 가능

남은 임기 동안에 맞벌이 맞돌봄 체제로의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시장경제의 질서를 지키는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서 같이 가계소득에 기여하면서 같이 돌보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서 같이 재밌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려면 차별금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덕재 아까 루스벨트 관련 책으로 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저자가 루스벨트의 뉴딜 시기를 평가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루스벨트의 뉴딜이 고정됐던 것이 아니라, 정

책을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틀고 또 새롭게 하면서 실용주의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countervailing power를 미국 내수시장의 힘을 복원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겠다고 하길래 일관된 문제의식이 작동했더라고요. 즉, 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용적 방식으로 접근이 됐던 것이지요.

우리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빈약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한계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하나하나씩 쌓아나가고, 특정한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개혁 과제들에서 하나하나씩 실용적으로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체로 여기에 공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장시간 귀중한 토론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